

서울 무상 무선인터넷 100일이면 가능하다:

“취임 후 100일 이내 지하철, 버스, 공공
장소에서 무상 무선인터넷을 실현하겠
습니다.”

발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패널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 교수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구본권 한겨레 기자

일 시 2010년 3월 12일 금 10시

연락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03호)

주 최 진보신당

서울 무상 무선인터넷 100일이면 가능하다:

“취임 후 100일 이내 지하철 버스 공공장소에서 무상 무선인터넷 실현하겠습니다.”

1. 갈라파고스 증후군(Galápagos syndrome)

이제는 꽤나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2009년 7월 19일자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2009. 7. 19)에는 휴대폰이나 무선인터넷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히 흥미로워할 기사 하나가 실렸다. 그것은 1980~90년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주름잡던 제조업 강국인 일본의 휴대폰을 왜 오늘날의 세계 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가라는 물음이자 그에 대한 답이었다. “왜 일본의 휴대폰은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나? …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문제점을 설명할 명칭을 가지고 있다. 갈라파고스 증후군.” 기사에 언급된 일본인은 일본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무선인터넷 서비스 아이모드(i-mode)를 개발한 나쓰노 다케시(Takeshi Natsuno) 교수였다. “일본의 휴대폰은 갈라파고스 제도(Galápagos Islands)에서 다윈(Darwin)이 조우했던 고유종들과 같습니다.” 여기서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란 내부적으로는 다양하고 뛰어났지만 외부와의 교류 없이 독자적으로만 기술을 발전시키다 국제표준에서 동떨어져 결국에는 경쟁에서 뒤지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다윈이 갈라파고스에서 조우했던 다양한 생물군들이 육지와의 교류 이후 결국에는 멸종 위치에 처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를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날 한국의 정보통신 업계 역시 갈라파고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혹자는 현재 한국**

정보통신 분야가 겪고 있는 병폐를,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현격한 어려움을 겪는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즉 자폐증(autism)에 비유하기도 한다. 과거 곳곳에 설치된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로 인하여 얻게 된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평가는 이제 허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최근에는 어렵사리 구축되고 있는 무선인터넷 생태계에서조차 정부의 관계 당국이 시민들 간의 소통과 기술적 진화를 가로막는 퇴행적 모습을 보여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

(1) 한국의 유선인터넷

한국의 경우에는 일단 유선인터넷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보여 왔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이다. 사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주로 사용자의 인권이나 기본권의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 사업자들에게도 상당히 불리하게, 일종의 역차별로 작용하는 제도이다. 가령, 지난 해 하루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의무적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개정되자 구글(google)이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youtube)는 이를 수용하는 대신 한국에서의 서비스 철학을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청와대에서 업로드 하는 홍보동영상의 제공 장소마저 한국으로 설정하지 못하게 된 망신은 둘째치더라도, 국내법의 규제를 받는 국내 업체들은 훨씬 불리하게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근, ‘홈페이지를 열어보는 페이지뷰를 기준으로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서비스가 국내의 포털 업체들을 제치고 동영상 서비스 1위에 올랐다는 점,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러한 결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국내법의 규제를 꼽는다는 점’(전자신문, 2010. 2. 23)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유선인터넷의 또 다른 병폐는 웹 표준의 미준수 혹은 액티브엑스(ActiveX)의 문제이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웹들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웹 표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는 액티브엑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곳곳에서 발생한다. 우선 한국의 사용자들은 액티브엑스의 반복적 설치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한다. 또한, 정부사이트건 금융 사이트건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가입조차 할 수 없는 탓에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구글 해킹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액티브엑스는 보안에 취약하다. 과거 디도스(DDos) 공격 당시 한국의 피해가 극심했던 것 역시 오직 한국만이 액티브엑스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들린다. 물론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한국이 선도적으로 기술을 도입할 당시의 액티브엑스는 무척이나 편리하고 우수한 기술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 지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본사마저도 해당 기술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를 폐기하고 있는 마당에 오직 한국 정부만이 — 금융거래 등에 있어서 액티브엑스 기반의 공인인증서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 그 기술의 사용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결국 우리 정부는 한국이 ‘전 세계 유일의 MS 종속국’이 되도록 획책하고 있는 셈이다.

(2) 한국의 무선인터넷

무선인터넷의 문제는 보다 복잡하다. 한국의 유선인터넷이 정부에 의해 “강요된 특이성”(오마이뉴스 2009. 9. 10)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다면, 무선인터넷은 유선인터넷에서의 문제점이 그대로 전이되는 동시에 망사업자들의 비도덕적 사업모델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무선인터넷의 생태계는 주로 망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아니, 적어도 현재의 스마트폰 열풍이 있기 전까지는 생태계 자체가 형성되거나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보다 적절할 것이다. 즉, 한 두 종에 불과한 포식자가 전체 생태계의 자원을 독식하는, 그리하여 생태계 자체가 파괴되는 형국이었던 것이다.

케이티(KT)에 의해서 아이폰이 도입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의 무선인터넷은 그야말로 사용해서는 안 될 요물로 낙인 찍혀 있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수십, 수백만의, 혹은 그 이상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나돌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망사업자들은 “시골할머니나 어린 아이들처럼 이동통신환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실수나 무지를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상식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었던 것**(김태훈 2009. 12. 7)이다. 이런 식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국내 단말기의 다운그레이드는 사용자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의 성공신화에 고무된 에스케이티(SKI)가 제공한 티스토어가 무선랜을 사용할 수 없도록 고안되었었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2004년을 기점으로 하여 **망사업자들이 저인망식으로 콘텐츠 산업에 뛰어든 것 역시 모바일 생태계의 파괴를 부채질 했다.** 모바일 콘텐츠는 통신망이 아니면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고 때문에 “망사업자는 본질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에 **망사업자는 자기 망에 결합된 자사의 콘텐츠 서비스에만 특혜를 준다든지, “망사용을 기준으로 한 ‘콘텐츠 수익 분배구조’에 심각한 모순”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김태훈 2009. 12. 7). 2005년 온라인에서 3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랑했나봐’로 윤도현이 벌어들인 수익은 고작 1,200만원에 불과하였는데, 이 충격적인 사건 역시 상기한 구조에서 비롯되었다(일간스포츠 2007. 6. 7). 이러한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은 사업영역을 빼앗기거나 망사업자에게 종속되고, 개발자나 저작권자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콘텐츠 제공 의욕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도 전이되어 결국 생태계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는 문제는 발생했다.

(3) 아이폰의 도입 이후 상황전개

우리는 애플이나 아이폰에 미혹된 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환경 자체에 불만이 많은 것이라는 네티즌들의 항변도 상기한 맥락에서 등장하였다. 그리고 아이폰은 도입 직후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몰고 왔다. 우선 **그간 사용해서는 안 될 서비스로 낙인이 찍혀있었던 무선인터넷**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가령, 미국의 통신업체인 에이티앤티(AT&T)의 무선인터넷 트래픽이 아이폰 도입 이후 3년 동안 49배 증가한 데 반해, 케이티(KT)의 무선인터넷 트래픽은 아이폰 출시 불과 2개월만에 122배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는 그간 국내의 무선인터넷이 그만큼 막혀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동안 침체일로에 빠져있던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활력을 얻게 된 점도 새로운 변화이며, 제조, 유통, 교육, 광고,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그러하다.

한편, 아이폰과 무선인터넷의 사용 증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①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거래 보안수단은 과연 타당한가, ②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타당한가, ③ 주파수공용통신에 국내 제도와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충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④ 게임이나 유해매체에 대한 기존의 심의 방법은 유효한가, ⑤ 망 개방이나 망 중립성, 콘텐츠 유통 구조의 개혁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⑥ 소셜네트워킹서비스는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 ⑦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공공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Government 2.0)와 같은 문제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먼저 ‘서울버스’에 대해 경기도가 보여주었던 모습부터가 그러했다. 경기도는 개발자인 고교생 유주완 군에게 법률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서울버스’에 대한 경기지역 버스교통정보를 차단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유주완 군은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디지털데일리 2010. 2. 21)랐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이후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다시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였지만, 원래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스마트폰과 PDA를 통한 서비스 개발에 나서겠다는 생각에 민간기업의 요청도 거절하는 등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뉴데일리 2009. 12. 22).

또한, 선거일 전 180일 동안 후보자들에 대한 ‘글’을 통해 비판 또는 지지를 총체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93조를 인터넷 게시판뿐 아니라 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까지 적용하려는 법원과 선관위의 태도도 문제이다. 물론 선관위는 트위터에 오르는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지를 별도로 검토하여 판단하겠다고 하지만,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 자체가 너무 폭넓게 되어 있어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한겨레 2010. 3. 1).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이 무선인터넷에서도 공인인증서를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힌 점과 케이티(KT)가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업로드를 문제 삼은 것은 웹 표준 미준수와 인터넷 실명제라는 유선인터넷의 문제가 무선인터넷의 영역으로 까지 전이된 경우라 할 수 있다.

3. 진보신당의 서울 무상 무선인터넷 구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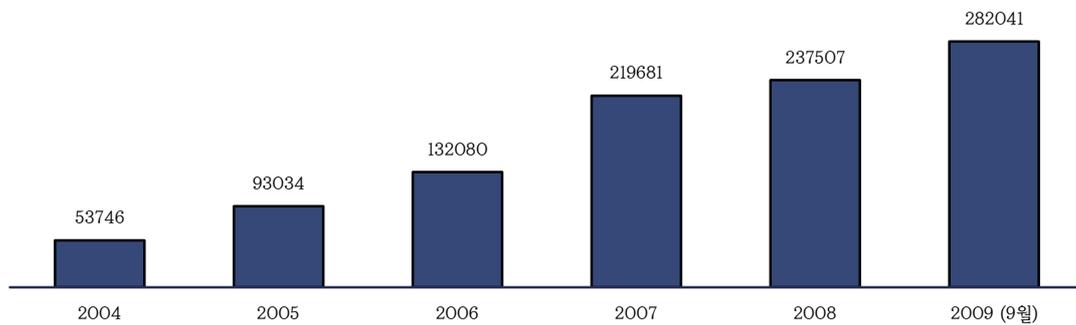
(1) 무상 무선인터넷 구축의 타당성

진보신당이 약속하는 서울 무상 무선인터넷도 상기한 한국 정보통신의 자폐적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진보신당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① 서울시의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핫스팟존’화 한다는 계획을, 아울러 ② 버스정류소, 지하철 역사, 관공서, 공원, 도서관, 미술관 등의 공공장소 및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 지역, 인구 밀도가 높은 집단 거주 장소, 그리고 여타의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핫스팟존을 구축하거나 ③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일반 주거 지역에서도 시민들로 하여금 마음껏 무선인터넷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오는 6월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의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는 그간 국내의 망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편익을 등한시하고 중소기업과 개발자들에게 횡포에 가까운 사업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발전 자체가 지체되어왔던 국내 무선인터넷 사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왜 하필 와이파이인가, 향후의 기술적 발전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향후의 기술적 발전이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데이터통신의 영역에서 와이파이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와이파이 핫스팟존은 세계적으로 425%나 증가하였으며,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단말기(PDA, 노트북, 스마트폰, PMP, 그리고 소니의 PSP나 닌텐도의 DS 등과 같은 게임단말기)가 이미 와이파이 접속 기능을 내장한 채로 출시가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는 일반 피쳐폰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냉장고에도 와이파이 기능이 부착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와이파이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나 가격이 저렴할 뿐만이 아니라 와이파이 기술 자체도 계속 진화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가치는 충분하다.

와이파이 핫스팟존 증가현황 (2004-2009)



자료: JiWire Mobile Audience Insights Report July-September 2009

그에 반해 **한국의 핫스팟존은 충분하지 않다**. 모바일 관련 기업 지와이어(JiWire)의 연구결과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2009. 11. 17)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핫스팟존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미국이며 2위는 중국, 그리고 3위는 영국이다**. 특히, 중국의 핫스팟존은 2009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만 21.8%의 증가세를 보여 와이파이 망에 대한 투자 열기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구수를 감안하여 100만 명당 핫스팟존의 수를 비교하게 되면 스웨덴이 754.9개로 1위이다. 2위는 451.5를 기록한 영국이며, 3위는 411.7개를 기록한 프랑스이다**. 한국의 경우는 순수 핫스팟존의 수를 기준으로 7위를 기록하였으며, 100만 명당 핫스팟존의 순위는 259.4개를 기록하였다. 어찌 보면 이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명성에 비추어보면 이는 분명 퇴행적 결과라 할 수 있다.

〈전 세계 와이파이 핫스팟존 구축 순위〉

3분기 순위	국가	핫스팟존의 수	2분기 순위	2분기 대비 증가율	100만 명당 핫스팟존의 수
1	미국	67,837	1	0.6%	222.4
2	중국	34,931	2	21.8%	26.3
3	영국	27,530	3	0.3%	451.5
4	프랑스	25,652	4	0.1%	411.7
5	러시아	14,549	5	1.4%	103.9
6	독일	12,814	6	0.8%	176.9
7	한국	11,604	7	0%	259.4
8	일본	11,604	8	-0.1%	91.4
9	스웨덴	6,893	9	3.4%	754.9
10	대만	5,444	10	1.1%	239.6

자료: The Economist(2009. 11. 17); JiWire(2009)

또한, 최근 망사업자들이 와이파이 핫스팟존을 확충하겠다고 한 미당에 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이를 구축하는가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민간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핫스팟존의 구축은 모든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거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한국 핫스팟존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티(KT)의 경우에는 지불능력이 있는 자사의 고객에게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고루 누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자사의 가맹점뿐만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도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핫스팟존을 구축하겠다는 에스케이티(SKI)의 발표는 기업의 입장에서 비배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족 때문에 사회적으로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현재 망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그리고 일부는 중복되는 무선 데이터통신 기술들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집중하는 투자를 현재로서는 진행시키기 어렵거나 현 시점에서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상황이 변화하면 이를 연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혹자는 이러한 무상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소수의 스마트폰 유저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사용자수는 단시일 내에 크게 증가할 것이며, 아울러 이는 단지 스마트폰의 문제만도 아니다. 상기한대로 무상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미 제조, 유통, 교육, 광고,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형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가 제공하는 무상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확대에 의하여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동시에 이는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 제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단말기의 개발로 인하여 행정서비스나 복지의 향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PDA, 노트북, 스마트폰, PMP, 그리고 게임단말기 외에도, 현재 무선인터넷 망을 광범위하게 구축한 일부 국가의 경우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업무 수행을 위한 단말기, 즉 용의자나 범죄경력, 진입건물의 도면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한 단말기를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wikipedia).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노인들이 휴대하는 개인용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도 있다. 즉, 개인의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해 전담 병원이나 주치의에게 정기적으로 전달이 되며 만약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가 감지될 경우에는 바로 해당 의료 기관에 알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관련 기기 개발에는 해당 국가와 유럽연합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BBC 2004. 4. 7).

끝으로 무상 무선인터넷을 구축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정보기본권의 보장을 들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로의 접근이나 가공능력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유엔의 경우에는

1997년부터 인터넷 접속을 인간의 권리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UN Administrative Committee on Coordination 1997)해왔고 실제로 에스토니아, 프랑스, 핀란드, 그리고 그리스와 같은 나라를 이를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환경 자체가 무선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모바일의 영역에서까지 모든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속을 가능케 해야 한다.

그리하여 — 혹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무선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하지만 — 이미 세계의 다양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선인터넷 네트워크의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수 백 개의 지역이 관련 계획을 실행하였거나 계획(Vos 2009)하고 있으며, 유럽의 여러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브라질과 같은 남미국가,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중국에 이르는 동북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이러한 경향에 동참하고 있다. 오늘날 해외의 언론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Municipal Wireless Broadband 혹은 Municipal Broadband와 같은 용어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등장하였다.

(2) 서울 무상 무선인터넷 구축계획

진보신당은 총 3단계에 걸쳐 서울 무상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1단계에서는 서울시장 취임 100일 이내에 서울시내 모든 버스와 지하철을 움직이는 핫스팟존화하는 동시에 버스정류소 지하철 역사, 관공서, 공원, 도서관, 미술관 등의 공공장소에 핫스팟존을 구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단계에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와이브로 망을 와이파이 망으로 전환시켜 주는,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와이파이 라우터(router)를 서울시내의 버스 7,598대와 3,508량의 지하철(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보유한 지하철)에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내버스의 경우 하루 평균 567만 명이, 서울지하철의 경우 환승인원을 제외한 순승차 인원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473만 명이 이용을 하는데, 바로 이들이 이동 중에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다. 한편, 버스정류소, 지하철 역사, 관공서, 공원,

도서관, 미술관 등의 공공장소에 구축하는 핫스팟존은 기존의 방법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2단계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지역에 추가적인 핫스팟존을 구축하며, 3단계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일반 주거지역으로까지 확대한다. 단, 3단계에서는 무조건적인 핫스팟존의 추가 구축이 아니라 사실상 와이파이 접속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망사업자, 기업, 공공기관, 개인 등의 협력을 이루는 과정을 주도할 것이다. 즉,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통신사가 보급했거나 기업, 공공기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접속 포인트들을 많은 이들이 안전하게, 함께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도구나 표준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한편, 이 사업의 추진모델에 대해서는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참조 중이다. 그리고 그동안 해외의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실행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조율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오기석 외 2009; 정우수 외 2007). 서울의 경우도 망사업자들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토의를 거쳐 기존 망의 이용과 비용 문제 등을 포괄하는 사업모델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상기한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대중들에게 개방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최근에는 공공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권력이 확대, 분산,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나(김현곤 외 2009), 아직까지도 경기도나 서울의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현상에 조용하고 있지 않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PDA를 통한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생각에 민간기업의 정보공개 요청도 거절하는 행태를 보였으며(뉴데일리, 2009. 12. 22), 서울의 경우에도 시민들에게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모바일 포털'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해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이들은 아직도 개방성, 쌍방향성, 참여, 공유 등의 시대정신이 아니라 직접 가공하고 개발하겠다는 일방향적 소통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공공정부의 개방성과 쌍방향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풍부한 정부의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로 기능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창출하려 한다.

참고자료

- 김태훈. 2009. 12. 17. “소비자 호주머니만 바라보는 통신사들”(http://timshel.kr/141)
- 김현곤 외. 2009. “정보사회의 사회통합구조와 정부-시민 간 소통 활성화 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 뉴데일리. 2009. 12. 22. “고2가 개발한 ‘서울버스’에 서울시·경기도 혼쫌.”
- 디지털데일리. 2010. 2. 21. “아이폰 앱 ‘서울버스’ 개발자 유주완 학생.”
- 오마이뉴스. 2009. 9. 10. ““넌 누구냐?” ‘인증 받았냐?’고 제발 묻지 마세요.”
- 오기석 외. 2009. “미국 MWB 구축동향과 시사점”. 『방송통신정책』(제21권 11호 통권 464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전자신문. 2010. 2. 23.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1위 ‘등극.’”
- 정우수 외. 2007. “미국의 Municipal Broadband 사업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제22권 제3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일간스포츠. 2007. 6. 7. “윤도현 ‘30억이지만 내 수익은 1,200만원.’”
- 한겨레. 2010. 3. 1. “선거, 그들만의 잔치.”

- BBC. 2004. 4. 7. “Tiny Estonia leads internet revolution.”
- JiWire. 2009. “JiWire Mobile Audience Insights Reptot July-September 2009.”
- New York Times. 2009. 7. 19. “Why Japan’s Cellphones Haven’t Gone Global.”
- The Economist. 2009. 11. 17. “Which countries have most WiFi hotspots?”
- UN Administrative Committee on Coordination. 1997. “ACC Statement on Universal Access to Basic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http://www.unites.org/html/resource/acc1997.htm.)
- Vos, Esme. 2009. “Muniwireless updates list of cities and counties with large Wi-Fi networks.”(http://www.muniwireless.com/2009/03/28/muniwireless-list-of-cities-with-wifi/)
- wikipedia. “Municipal Broadband.”(검색어)